

산업정책



- 구매확인서 온라인 발급제 전면 시행
- 중소기업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
- 임대전용産團 입주기업 운신 폭 커져
- 신보, 중소기업 온라인대출장터 서비스 시작
- 중소기업 필요자금 60% 기술보증으로 조달
- 조달물품 '최소구매규격 예고제' 도입
- 중소기업 신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 사업장이 직접 노동관계법 위반 점검
- 기표원, 소비자 안전 위해 관련 정보 상세히 밝혀
- 중소기업 기술임치 및 기술자료 입증 온라인 서비스 개시
- 중소기업 미래 기술 '로드맵' 나왔다
- 중기청, 해외녹색규제 대응 23억원 지원
- 부적격업체 공공입찰 원천차단
- 중소기업, 중견기업 돼도 3년간 우대 혜택
- 지경부, 50여개 규제개혁 추진
- 경기도, 녹색산업 육성사업 확대
- 대·중기업 납품단가 공유시스템 구축
- 올 청년취업인턴사업 1934억 투입
- "에너지 목표관리제 올해 상반기 시행"

구매확인서 온라인 발급제 전면 시행

올 7월부터 무역 관련 구매확인서의 온라인 발급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구매확인서 온라인 발급과 관련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은행창구를 통한 구매확인서 발급은 중단되고, 각 사업자는 U트레이드포털(www.utradehub.or.kr)이나 발급기관과 연계된 내부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해 온라인 발급신청이 어려운 사업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해 구매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경부는 온라인으로 발급된 구매확인서 발급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매확인서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자에게 원자재 등을 공급한 경우 국내업체가 발급받는 증명서로, 확인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간 서류 발급 및 세무서 제출에 소요되던 기업의 수출비용과 납세비용이 줄고, 행정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146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공단은 올해 9개 분야에 걸쳐 130여개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2만2천500명의 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훈련과정은 사무분야 6개(전략경영, 인사·조직관리·HRD, 영업·마케팅, 유통·물류, 회계, 리더십) 기술분야 3개(생산·품질관리, 생산기술, 기술경영·연구개발) 등 총 9개 영역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우수한 시설과 강사진을 갖춘 연구소, 대학, 대기업 사내연수원,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접수하고 개설할 과정을 2월25일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3월 초순부터 공단(www.hrdkorea.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과정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는 훈련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훈련분야에 따라 차등 보조한다.

자세한 문의는 공단 근로자지원팀(☎02-3271-9368)으로 하면 된다.

임대전용 産團 입주기업 운신 폭 커져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사실상 불가능했던 분양전환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개발법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을 최근 개정하고 2008년 1월 이후 공고한 지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임대전용 산업단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조성하는 산업단지 가운데 일정 부분을 초기 자본이 부족해 부지 매입이 어려운 창업 초기 중소기업과 해외 유턴 기업,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최장 50년을 보장해 저렴하게 빌려주는 산업용지로, 현재 전국적으로 30여곳이 조성 중이거나 준공된 상태다.

개정안은 우선 의무임대기간을 창업 기업의 손익 분기점 달성 시기 등을 고려해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이에따라 기업은 최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만 지나면 다시 5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중단해도 되고, 분양전환해 부지를 아예 사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분양전환 요건도 애초 '국가 정책 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 분양전환 여부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거의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입주 기업 희망시'로 변경해 해당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분양전환 때의 가격은 기업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고 사업시행자가 일정

수준의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분양전환 시기가 사업 준공 후 10년 미만일 때는 조성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10년 이상일 때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보, 中소 온라인대출장터 서비스 시작

신용보증기금은 지난달 개통한 중소기업 온라인 대출장터의 1호 고객을 배출하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과 은행이 서로 정보를 교환해 대출상품을 사고파는 온라인 장터로, 지난달 21일 신보 홈페이지(<http://www.kodit.co.kr>)에 구축된 이후 광주광역시 한 중소기업이 대출장터를 통해 5%대의 낮은 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호 고객이 탄생했다.

신보는 또 지난달 31일 출시한 '일석e조보험'도 시내 영등포의 한 중소기업이 첫 보험계약자로 가입해 20여원의 납품대금 위험을 보장받고 동시에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일석e조보험은 중소기업이 신보의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 납품대금 회수 위험성에 대한 보장을 받으면서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받는 상품이다.

중소 필요자금 60% 기술보증으로 조달

기술개발에 특화된 중소기업들이 기술보증을 통해 필요자금의 60% 가량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중소기업학회는 기술보증을 받은 1천 852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술보증 자금조달효과란 부동산 담보 등 일반적인 대출시스템을 통해 조달한 자금 외에 순수하게 기술보증으로 조달 가능한 자금 비중을 의미하며 기술 중소기업들이 기술보증을 통하지 않고 일반적인 수단만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경우 필요 자금의 40% 수준밖에 조달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첫 보증 이후 5년 이내에 추가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의 성장성과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증 기업에 대해 자금 수요를 판단해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기업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술보증자금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시스템은 과거 실적과 담보가치만 중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력 중심의 기술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에 기초한 기술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달물품 '최소구매규격 예고제' 도입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조달물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제'가 도입된다.

조달청은 최근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운영규정'을 제정,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제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물품의 품질기준 등을 일정기간 예고한 뒤 기준에 적합한 물품만 구매하는 제도이다.

사전예고 대상은 태양광 발전장치, 공기살균기, 합성목재, 칠판, 금속재울타리 등 10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세계 시장 선점이 필요한 친환경 녹색제품, IT 등 신성장 동력 제품, 국민들의 안전과 위생에 직결되는 제품 등이다.

친환경 녹색분야에서는 이미 지난해 2월 31개 제품의 최소 품질 기준을 정했었다.

최소 구매기준은 KS 등 국가표준이 있는 분야의 제품일 경우 국가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국가표준이 없는 분야는 국내 기술수준, 제품개발 속도, 품질개선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별도의 조달표준 규격을 제정, 운용키로 했다.

조달청은 사전 예고대상 물품의 경우 6개월전에 최소 구매규격을 나라장터에 공고하기로 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기업으로부터 적격성 평가 및 가격자료를 제출받아 일정 품질이상의 적격자에게만 MAS 등록을 허용하게 된다.

또한 1~2년마다 구매규격의 품질 수준을 높여갈

계획이며 다만 최소 구매규격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술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구매규격 상향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조달청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제도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적극적인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라며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소 신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중소기업이 개발하려는 신기술의 기술성·경제성 등을 분석하고 사업화 전략 수립까지 지원하는 R&D 기획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작년 3~6월 접수한 우수 신기술 과제 84개에 대한 R&D자금 235억원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지원 대상 과제는 기계와 생명, 소재, 화학 등으로 기술혁신개발 사업에 53개 과제 193억원,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에 42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기획 자금은 기술성과 시장성 분석, 사업화 전략 수립 등에 쓰이며 우수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 자금도 자동으로 지원받는다.

중기청은 중소기업계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올해 연구개발 기획 지원 사업의 실행 계획을 오는 3월에 공고하기로 했다.

사업장이 직접 노동관계법 위반 점검

이달부터 영세 사업장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약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10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장 7천285곳을 상대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감독관이 사후에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바로잡도록 하는 방식 대신 사업장이 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별 지원업체 규모는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2천87곳,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천899곳, 부산지방고용노동청 1천137곳, 광주지방고용노동청 808곳, 대구지방고용노동청 681곳, 대전지방고용노동청 673곳 등이다.

고용부는 이 사업의 위탁운영 기관을 선정해 3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위탁운영 기관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선정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대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지원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업주가 이번 사업을 통해 준법의식을 높임으로써 근로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표원, 소비자 안전 위해 관련 정보 상세히 밝혀

올해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제품의 정보가 상세히 공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안전에 중대 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 취소조치는 물론 모델명과 사진, 제조기업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기로 했다.

또 조달청과 유통업체 등에도 관련 정보를 통보해 불량제품 유통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은 최근 5년간 부적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올 한해 전기용품 52개 품목, 공산품 41개 품목 등 총 93개 품목에 대한 시판품 조사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매년 3000개 이상의 시중 판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그 상세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량제품이 시장에서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중소 기술임치 및 기술자료 입증 온라인 서비스 개시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밀 기술자료에 대한 임치 및 원본증명 서비스가 강화되어,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핵심기술의 안전한 보호장치인 기술임치제도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3월 7일부터 개시한다.

아울러 파일 등 기술자료 문서의 보유여부 및 원본 일치여부 등을 전자암호를 통해 확인하여 주는 기술자료 입증서비스도 개시한다.

* 기술임치제도 :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등을 기술임치센터에 맡겨두고 개발사실 및 내용 등의 증명하고, 파산·폐업 시 대기업이 임치물을 활용하는 제도

* 기술입증제도 :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자사에 보관하고 전자지문(해쉬코드) 및 타임스탬프만 기술임치센터에 보관하여 개발시점을 증명하는 제도

* 법적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중소기업의 기술임치제도의 이용은 급증('09년 : 120건, '10년 : 307건, '11년 : 600건(예상))하고 있으나,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서울시 구로구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내에 위치한 「기술임치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임치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술임치신청에서부터 임치물 전송, 협약까지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중소기업이 겪었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기술자료 입증서비스」의 실시에 따라, 중소기업이 파일자료를 외부로 보내지 않고서도 개발시점 등을 증명받고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특허제도 외에도 중소기업이 저비용으로 비밀을 보

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금번 「온라인 임차 서비스」와 「기술자료 입증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 이용비용 : 임차제도 : 신규계약 30만원/년, 갱신계약 15만원/년, 기술자료 입증제도 : 5천원 / 건
문의 : 기술협력과 이시희(042-481-4401)

중소기업 미래 기술 ‘로드맵’ 나왔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중소기업이 향후 3년 동안 개발해야 할 유망 기술을 제시한 ‘중소기업형 통합 기술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타 기관에서 작성한 로드맵의 핵심 기술은 그 범위가 크고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이번 로드맵은 기술의 범위를 기존 로드맵보다 작게 설정하고, 기술 스펙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핵심 기술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당 기술의 수준이나 산업특성 및 시장규모, 성장성 등을 중소기업 측면에서 분석하여,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로드맵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300여명의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위원회를 운영하여 약 10개월 동안의 작업이 진행되었다.

* 전략분야 선정 위원회(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전략제품 선정위원회(2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핵심기술 선정위원회(11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로드맵 수립 과정을 보면 쏠 산업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먼저, 정부에서 기 발표한 17대 신성장동력분야와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뿌리산업(제조기반)을 대상으로 녹색, 첨단 융합, 제조기반 분야를 중점 지원할 3개 대분야로 선정하고

기술성, 시장성, 중소기업성 등의 지표에 따라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축소시켜, 대분야로부터 좀 더 구체화된 형태인 26개 전략분야를 도출하였다.

또한, 26개 전략분야로부터 112개 전략제품을 도출한 후, 각 전략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1,050개 핵심기술들을 선정하였고, 핵심기술들을 향후 3년 동안의 개발 목표와 함께 전략제품 별로 제시하여, 최종 112개의 전략제품 별 로드맵을 완성하였다.

* 로드맵 예시 : 제조기반(3대분야) - 금형(26개 전략분야)-유리광학 부품용 초정밀 프레스금형(112개 전략제품) - 8개 핵심기술

* 로드맵은 편집 작업을 거쳐 3월 초쯤 공개·배포될 예정

그리고 도출된 핵심기술은 2011년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의 미래선도 과제(3월초 공고예정)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 로드맵은 매년 수정과 보완을 통해 중소기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술정책과 김민규(042-481-4402)

중기청, 해외녹색규제 대응 23억원 지원

해외녹색규제 및 기후변화협약에 중소기업이 협력 대응할 수 있도록 녹색공급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수립하는 「중소기업 그린SCM확산지원사업」이 시행된다.

* SCM : Supply Chain Management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2011년 중소기업 그린SCM확산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3월28일부터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본 사업은 총 23억원 규모에서 2개의 세부사업*으로 수행되고, 주관기업당 전체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총 144개사를 지원한다.

* 중·소 그린SCM구축(20억원, 132개사), 온실가스 자발적감축(3억원, 12개사)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소 그린SCM구축사업은 해외시장에 완제품을 수출하거나 다국적기업에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이 협력업체와 함께 해외 녹색규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매출액 150억원 및 수출비중 20% 이상인 주관기업과 10개 내외의 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되며, 지원내용은 에너지, 온실가스, 유해물질 등 녹색공급망관리체제를 개발·구축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사업은 산업단지공단에서 위치한 에너지다소비·온실가스다배출 유사업종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개의 온실가스감축컨설팅사와 2~3개의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구성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목록화하는 인벤토리를

구축, 검증서 발급,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그린넷(www.greenbiz.go.kr)을 통해 4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격, 지원기준, 사업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중소기업청(녹색성장팀 (☎ 042-481-4508)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녹색성장팀 오성태(042-481-4508)

부적격업체 공공입찰 원천차단

앞으로 부적격자의 공공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조달청은 휴·폐업 등 부적격자가 공공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적격자 입찰차단시스템’을 구축, 지난달 2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국세청, 행정안전부 협조로 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해 입찰참가 업체의 휴·폐업 정보를 실시간 파악, 부적격자의 입찰참여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통합관리하는 ‘행정처분정보시스템’과 나라장터를 연계시켰고 ‘PC공유 접속차단시스템’ 등도 도입했다.

그동안 입찰업체의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는 데 1주일가량 걸리면서 부적격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조달청 관계자는 “부적격자 입찰차단시스템이 구축돼 나라장터에서 부적격자의 입찰이나 불법 대리 입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는 문제가 드러나면 즉시 전자조달시스템에 반영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소, 중견기업 태도 3년간 우대 혜택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기존 혜택을 3년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은 국가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거나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때 대규모 기업보다 중소기업 규모 기업을 우대하고 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은 300명 이하, 그 외의 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100명 이하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이다.

개정 시행령은 작년까지 우선지원 대상 사업장이었지만 근로자수가 늘어 올해부터 중견(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각종 지원이 끊겨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 많았다”며 “유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신고 등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경부, 50여개 규제개혁 추진

지식경제부는 일자리 창출과 녹색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올해 50여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우선 산업단지내 대학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용지 최소 분할면적 제한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대학이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인력양성, 취업, R&D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단지내 관리권자, 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최소 분할면적(기존 1650㎡ 이상) 제한을 완화해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산업단지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LED 신조명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대체천연가스 보급확대 기반을 마련해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갖출 예정이다.

LED 신조명 분야의 중복되고 복잡한 인증제도는

간소화해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그린을 사업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031-8008-4815) 또는 경기테크노파크 녹색성장지원단(☎031-500-3038)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녹색산업 육성사업 확대

경기도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올(Green-All)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그린올 사업은 정부의 녹색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인증 취득, 홍보, 자금, 판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녹색인증 지원 대상기업을 지난해보다 20개 늘어난 1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기술력 시험·성능검사비를 1건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건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국내외 마케팅 비용 지원 건수를 7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인증 기업의 해외시장 진입을 위한 해외인증비용 지원을 신설해 건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그린올 홈페이지(www.green-all.kr)에 '녹색인증기업 사이버 홍보관'을 개설해 인증 기업의 기술과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 사업화 및 제품판로 개척을 위한 투자설명회, 통상촉진단, G-Fair(우수상품 전시회) 등 각종 기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녹색펀드 및 녹색자금 우선 투·융자, 도내 산업단지 입주 지원 등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大·中企 납품단가 공유시스템 구축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납품단가 정보공유시스템'을 만들어 납품단가의 변동 및 조정 여부 등을 상호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프레젠테이션에서 삼성전자·현대차·SK·LG전자·롯데쇼핑·포스코·GS·현대중공업·금호건설·대한항공·KT·두산인프라코어·한화STX조선해양·LS전선 등 15대 대기업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정보공유 시스템이 구축되면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납품단가 조정내역을 2, 3차 협력사들도 함께 알 수 있어 원가 및 납품단가를 산정할 때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해선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금지 ▲2차 협력사 이하로 하도급법 적용 확대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정위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대기업이 1~2차, 2~3차 협력사 간 동반성장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기업내 임직원이 공정거래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동반성장협의체,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회의 등을 통한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 등 동반성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용부는 창직인턴 사업 참여자에게 인턴기간 6개월 동안 약정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인턴 기간 수료 후 창직·창업에 성공하면 1인당 200만원의 창직 촉진 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올해 청년 취업 인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위탁 운영기관 149곳(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138개, 청년 창직인턴제 11개)을 선정했다.

인턴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취업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 등록하거나 위탁 운영 기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02-2110-7178)

올 청년취업인턴사업 1934억 투입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 취업 인턴사업에 1천934억원을 투입해 3만2천명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만9천명 규모로 운영될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 사업에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군필자는 최대 만 35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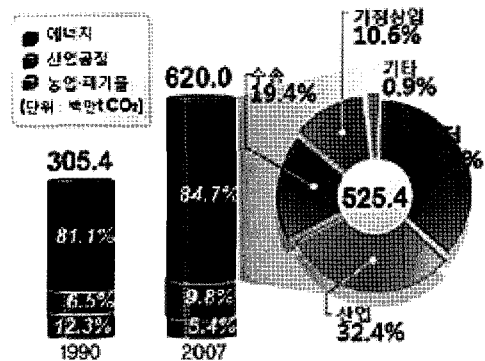
고용부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 인턴을 채용하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6개월 동안 임금의 50%를 8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인턴 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6개월간 매달 6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 500명 규모로 시범 운영됐던 청년 창직인턴 사업은 올해 3천명 규모로 확대된다.

문화콘텐츠 분야 전공자, 창직·창업 관련 교육 이수자, 창업동아리 경력자 등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에너지 목표관리제 올해 상반기 시행”

온실가스 배출현황



수송부문은 그린카 및 중대형차량 연비관리 기준 마련과 연비향상을 위한 타이어 효율등급 표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임의인증을 실시한 후 내년 11월부터 승용차용 타이어부터 의무화 할 계획이다.

기기부문은 고효율제품 대상 확대 및 기준강화를 통해 원천적인 절약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효율관리제도 3대 프로그램에 가스온수기, LED가로등기구 및 투광등기구, 서버, 손건조기 등을 추가해 신규품목 확대에 나선다.

이밖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개선, 1년 이내 유사품목 인증업체의 중복 공장심사가 이달부터 면제된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어떻게 추진되나

지난해 4월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와 사업장이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 편입된다.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각각 12만5천톤과 500TJ(테라줄) 이상인 경우(업체 기준) 관리업체로 지정되며 2014년 부터는 5만톤과 200TJ로 기준이 강화된다.

관리업체로 선정될 경우 상반기중 지정고시되며 9월말까지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12월말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에 따른 평가와 개선 명령은 다음해 6월 실시된다.

지난해 산업과 발전부문에서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수는 총 372개사로 이중 116개사가 중소기업이며 제지·목재, 요업, 시멘트, 비철금속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비중이 40% 이상이다.

감축목표 설정은 우선 2012년 목표 설정 시 과거 실적 기반을 산정하며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와 관련한 단위제품 생산량 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과 성과를 국내·외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는 벤치마킹 기반 목표설정으로 변경된다.

배출량산정과 보고 검증은 조직경계 설정부터 명세서 제출까지 9단계로 구성되며 검증업무를 수행할 검증기관은 통합운영지침 제정 이후 운영될 전망이다.

목표관리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 및 재정·R&D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업종별 표준공정을 도출하고 해당 공정별 매뉴얼을 개발해 표준화된 온실가스 및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지원 강화와 그린 IT 및 LED 등 에너지 고효율기기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 지원과 목표관리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및 명세서 작성 등을 지원 할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 화석연료 대체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를 투자 전체 전력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EU와 일본도 각각 재생에너지 비중목표를 20%와 10%로 설정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49%로 설정했으며 덴마크(30%), 독

일(18.7%) 등의 관련산업 육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간부분을 포함 4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 R&D 및 사업화 추진 △산업화 촉진시장 창출 △수출산업화 촉진 △기업 성장기반 강화 등으로 나눠 관련산업을 육성한다.

우선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선정, 2015년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자하고 중소·중견기업 주도로 부품, 소재, 장비기술개발 및 국산화에 1조원을 지원한다.

또 기술중심의 전문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 촉진과 테스트 베드(Test-bed)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화 촉진을 위해 공장, 전력, 항구, 학교 등 10대 중점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2015년까지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스타 기업 50개를 육성한다.

이밖에 기업성장지원금융과 세제지원, 수요단계별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참여를 촉진시켜 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시킨다는 전략이다.

- 대·중기 상생 그린 크레딧제 도입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해 투자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에너지절감량의 일부를 검증을 거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실적으로 활용하는 '그린 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대기업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앞선 투자 및 기술역량을 활용해 그린 크레딧 사업의 투자업체 역할을 수행하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투자 및 기술 지원 등을 받고 당해 실적으로 대기업에 이전하게 되며 관리 및 비관리업체 모두 참여가능하다.

크레딧은 대기업의 투자 및 이에 따른 감축량에 따라 발생되며 감축프로젝트에 기인한 감축량을 투자비중으로 나누어 배분하되 이를 사전에 확정된 기업간 협의를 반영해 설정한다.